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6. 2. 23.
No. 105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윤정재 부연구위원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정민기 부연구위원
노원준 부연구위원
박대근 전문연구원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주요 내용

- ① 광역적 도시문제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약화된 광역도시계획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도시권 통합관리와 도시 간 기능분담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② 광역도시계획 고유 기능 수행의 한계를 법·제도, 거버넌스, 집행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
 - (법·제도) 고유 역할이 불분명한 광역도시계획 제도 기반의 한계, 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미비로 인한 광역계획권 및 공간계획 한계
 - (거버넌스) 집행주체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계획추진체계의 제약, 광역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 발생과 협력 부재
 - (집행) 재정 지원 부재와 법제 한계로 인한 집행력 약화, 광역인프라 관리 기능 및 부문계획 통합·조정 기능 약화
- ③ 설문조사 결과,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 중 65.1%가 '계획의 법적 구속력 미약'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지자체 간 협력 유도 및 사업 실행을 위한 실용적 계획체계 마련'(74.6%)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음
- ④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위상 재정립과 실천 중심의 계획체계 구축 선행을 전제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 ① (기본방향) 연계·협력 기반 실행형 광역권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통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 ② (법·제도) 광역권 전담 도시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권역 기반의 계획 운영과 기능 중심 계획체계로의 개편
- ③ (거버넌스)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을 정립하여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의 제도적 강화와 협력·갈등조정 추진
- ④ (집행) 재정지원 구조의 통합과 부문계획 연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와 연계 등 집행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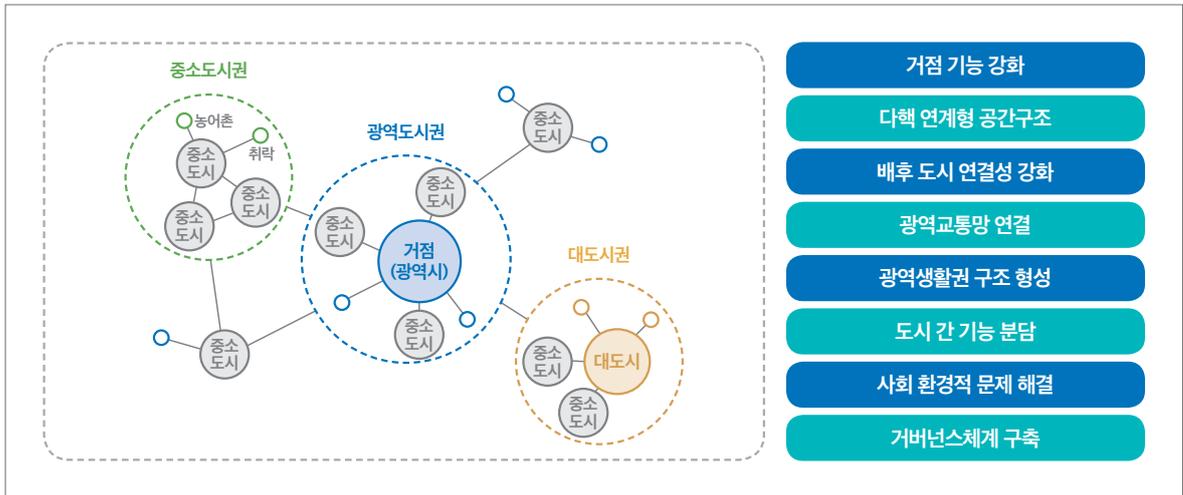
01. 메가시티 공간전략과 광역도시계획 기능

메가시티 개념과 공간전략

서구의 학계에서는 메가시티를 도시화의 확장 또는 연담 경향으로 바라보고 정의하였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토차원의 전략으로서 도시 간 통합을 메가시티로 정의하는 경향

- 본 연구에서는 메가시티를 경제통합적 개념보다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의 광역화와 지방 중소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협력해 더 큰 도시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
- 메가시티 공간전략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계획적 접근으로 규정
- 주요 구성요소로는 다핵적 거점 형성, 기능 연계형 공간구조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 간 기능 분담 및 도시시설·서비스 공유 등을 제시
- 궁극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따라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광역도시권의 발전 및 통합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권역 간 연계와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

그림 1 메가시티 공간전략의 개념



자료: 김현수 2022, 34; 우명제 2024,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의 필요성

(국가계획체계 내 역할) 국토 공간구조의 중간축으로서 광역권·도시권·생활권의 성장전략과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선제적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전략 및 기반시설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초광역권계획과의 기능 중복을 조정해 광역도시계획은 공간계획 중심의 계획적 관리 역할에, 초광역권계획은 연계·협력 중심의 균형발전 기능에 집중

(광역권 확대에 대한 대응 강화) 광역화 추세에 대응해 생활권 기반의 유연한 권역 재편이 필요하며, 거점도시권, 중소도시권과 인구감소 지역을 포괄하는 균형발전 도구로 기능을 확장해야 함

- 궁극적으로 제도·재정·운영 측면의 통합 고도화를 통해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계획으로 진화할 필요

(중소도시권 등 관리 수단 역할) 시·도, 시·군 간의 경계에 걸쳐 생활권이 밀접하게 형성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토지이용, 교통기반시설, 광역시설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의 도시관리 수단 필요

- 인접한 중심 대도시가 없고 쇠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소도시 간에는 공동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 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필요

02.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문제점 및 기능 제고 과제

광역도시계획 지자체 담당자·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이슈별 특성에 따라 제도, 운영, 활용, 수단 측면으로 영역들을 구분하였을 때, 제도와 계획의 활용 측면의 조사 내용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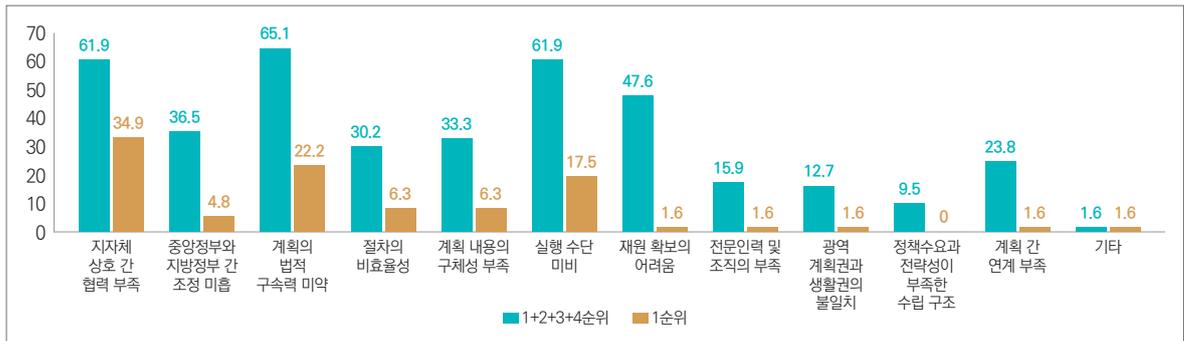
- 지역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별 현안 이슈, 문제점, 사례, 제도 개선 이슈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내용들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정리
- 총 51개의 이슈 중 제도(수립대상, 계획권 설정, 생활권 설정의 한계, 생활권계획 미비 등) 관련 이슈 17건(33.3%), 활용(계획 아젠다 부재, 계획의 역할 부족, 관심사 상이 등) 관련 이슈 13건(25.5%)이 가장 많았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하위계획이나 사업에 강제력이 낮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및 조율이 미흡하며, 광역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남

- 기도출 문제점 검증, 제도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9명) 및 기초지자체(21명) 담당자와 대학교 교수(10명) 및 시·도 연구원(23명) 등 도시계획 전문가 총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현행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 중 65.1%가 '계획의 법적 구속력 미약'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지자체 상호 간 협력 부족'과 '실행 수단 미비'의 응답 비중이 높게(61.9%) 나타남

그림 2 설문조사 결과: 현행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문제점

(N: 6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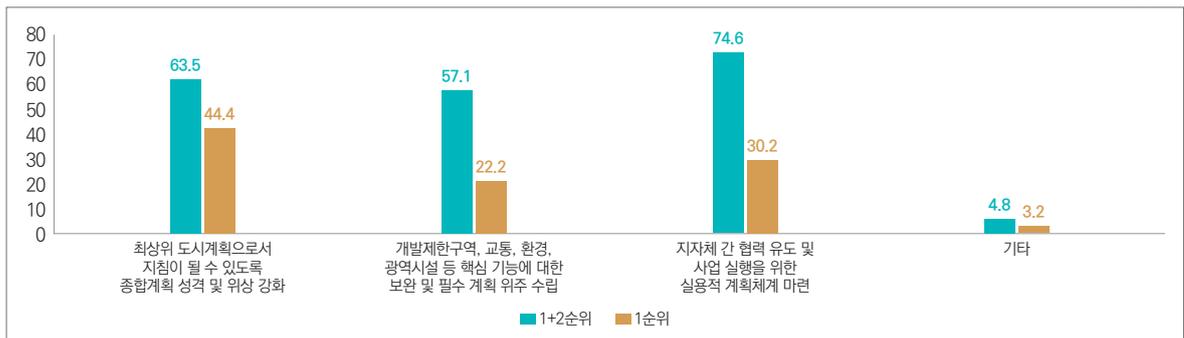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과 사업 실행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됨

-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지자체 간 협력 유도 및 사업 실행을 위한 실용적 계획체계 마련'의 선택 비율이 74.6%로 가장 높았고, '최상위 도시계획,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 및 위상 강화'(63.5%) 또한 강조
- 영역별 세부 문항에서는 '광역 단위 인프라 관리 및 재정 지원 근거 역할 강화', '생활권 중심 광역계획권 재조정', '기초지자체의 협의권 강화', '광역-기초 간 상설협의체 운영', '재정 지원 제도화' 등이 광역도시계획의 기능 제고 방안으로 제시

그림 3 설문조사 결과: 광역도시계획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N: 63,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광역도시계획 기능 수행의 주요 문제점

- (법·제도) 고유 역할이 불분명한 제도 기반의 한계, 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미비로 인한 광역계획권 및 공간계획 한계
- 제도적 위상 및 수립체계의 법적 규정 한계, 실질적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약화 및 정책 대응 한계, 수립 지연 및 경직적 제도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
 - 실제 생활권 기능적 연계와 괴리된 경직적 광역계획권 설정, 광역생활권 및 생활권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지침 미비
- (거버넌스) 집행주체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계획추진체계의 제약, 광역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과 협력 부재
- 형식적 운영에 머무는 광역도시계획 거버넌스, 협력 한계로 인한 광역도시계획 추진의 비효율성
 -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협력의 선행 미비, 지자체 간 이해충돌과 협력 부재로 인한 갈등 구조
- (집행) 재정 지원 부재와 법제 한계로 인한 집행력 약화, 광역인프라 관리 기능 및 부문계획 통합·조정 기능 약화
- 국비 지원 근거 부재로 인한 광역시설 추진 한계, 계획 집행을 위한 추진 예산의 부재와 위상의 열위
 - 부문계획의 단순 반영으로 인한 통합 기능 상실, 국가·부문계획의 연계 및 구체화 한계

그림 4 광역도시계획 기능 수행의 주요 문제점 검토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과제

법·제도상 문제점 개선

- (과제 1-1) 제도적 위상 정립과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광역도시계획은 법적·제도적 위상이 불명확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권한이 제약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므로, 제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계 확립 필요
- (과제 1-2) 광역계획권의 합리적 조정 및 광역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구축: 현행 광역계획권은 실제 생활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간계획의 현실성이 낮고 도시 간 연계와 상호 의존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권역 설정 체계도 미흡하므로, 생활권 기반의 광역계획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간 연계성과 계획의 합리성 강화 필요

거버넌스 운영 문제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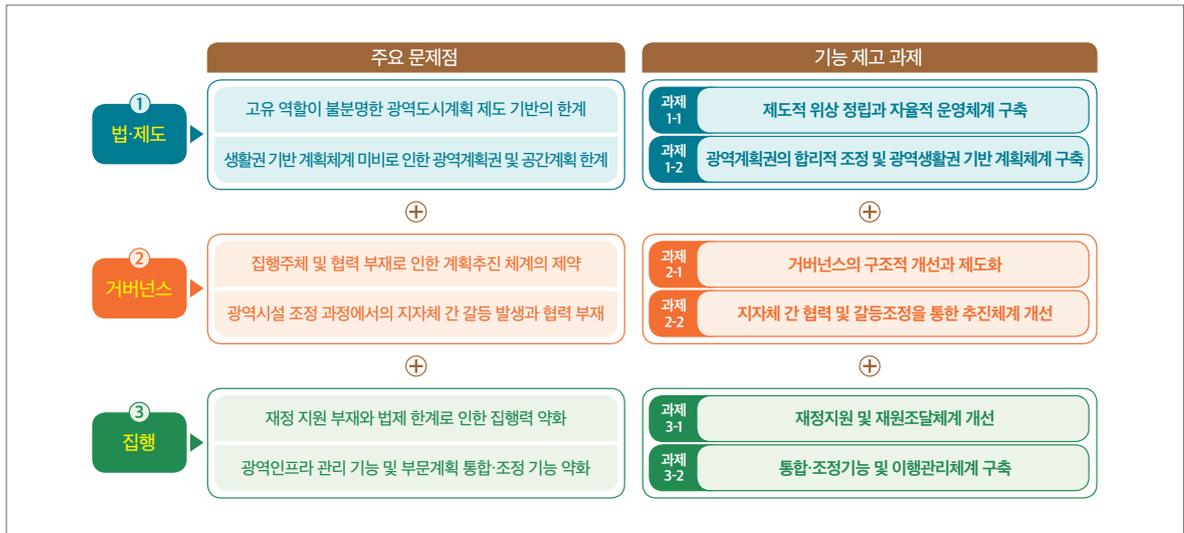
- (과제 2-1) 거버넌스의 구조적 개선과 제도화: 광역도시계획의 협의와 조정은 일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참여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상시적인 협력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하고 제도화된 협의·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과제 2-2) 지자체 간 협력 및 갈등조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광역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는 한편, 재정 부담의 분담 기준과 권한 배분 원칙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

집행상 문제점 개선

- (과제 3-1) 재정지원 및 자원조달체계 개선: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역시설 설치 등 광역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력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 요구
- (과제 3-2) 통합·조정기능 및 이행관리체계 구축: 국가계획을 광역권에 단순히 분배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교통·산업·환경·주택 등 주요 부문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종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

그림 5 주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능 제고 과제



03. 광역도시계획 해외 사례와 시사점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한 일본의 도시계획 동향

(권역의 생활권 중심 재편) 도시기능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 재편

- 광역계획권의 설정은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인구이동, 교통, 경제활동 흐름을 반영해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
- 오사카부와 아이치현 등 일본은 생활권 확대와 기반시설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구역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간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다층적 계획 제도) 시정촌 경계를 초월하여 실제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일본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계획 기능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역단위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등의 전략계획을, 기초자치단위는 생활밀착형 자족계획을 수립하도록 분담
-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

미국 남가주지방정부연합(South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의 광역권 관리 사례

(광역적 정합성) 계획의 실행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내에서 다양한 부문계획 간 통합과 상호 연계 추구

- 미국 남가주지방정부연합은 지역교통계획(Regional Transportation Plan: RTP)과 지속가능커뮤니티전략(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SCS)을 통합 수립
- 광역교통망 구축, 토지이용, 주택공급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적 통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부문 간 정합성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

(광역적 투자 방향성) 재정 제약 속에서 광역적 전략 투자를 위한 재정적 기반과 정책 연계체계 구축

- 세수 기반 금융과 같은 다양한 자원조달 방식으로 광역적 전략 투자(Regional Strategic Investments: RSIs)를 설계
- 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프레임과 자금 확보 수단이 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표 1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의 시사점 종합

| 구분 | 시사점 분류 | 주요 내용 |
|----|---------------------------|--------------------------------|
| 일본 | 실질 생활권 기반의 광역계획권 설정 |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 설정 필요 |
| | 계획 권한의 다층화와 역할 분담 | 광역·기초 간 기능분담을 명확히 설정 |
| 미국 | 부문계획 간 실질적 통합과 상호 연계 | 통합적 계획수립과 상·하위계획 간 연계 강화 |
| | 공간집약 및 기능 연계를 위한 개발 거점 설정 | 전략적 개발 유도구역(PDAs) 지정 및 지원 필요 |
| |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의 연계전략 마련 | 주택·교통·인프라 연계로 통합 성장 유도 |
| | 재정적 기반과 정책 연계체계 구축 | 투자 프레임과 자금 확보 수단이 제도적으로 병행 |
| |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협의 기반의 제도화 | 계획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

04.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기능 제고 방안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연계·협력 기반 실행형 광역권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제안

-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 강조보다는, 행정구역에 한정된 도시·군계획과 구분되는 광역도시권의 고유한 계획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 광역도시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역권 전담 도시계획의 제도적 위상 부여와 지역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뒷받침하는 협력적 계획체계 구축을 지향

그림 6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기본방향 및 영역별 기능 제고 방향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세부 방안

(법·제도) 광역권 전담 도시계획으로서의 위상 부여를 통한 제도 재정비

- (과제 1-1) 제도적 위상 정립과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 광역도시권 도시계획 수단으로서의 위상 부여: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의 단순 상위계획이 아닌 광역권 전담 계획으로 정립하고, 법령·수립지침 개편을 통해 광역 토지이용과 성장관리, 광역시설 결정 기능 제고
 - 계획수립 목적에 기반한 계획 내용의 자율화: 계획의 성격을 목적별로 다양화하고 목표연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상위계획 공백 해소를 위해 도시 여건에 따라 수립을 유도하고 선제적 협의 기반을 강화
 - 도시권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활동인구 개념의 도입: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권 특성화를 위해 활동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 이동과 분포 변화를 반영하고, 광역공간구조 조정과 도시 간 기능분담전략을 수립
- (과제 1-2) 광역계획권의 합리적 조정 및 광역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구축
 - 광역계획권 지정 확대: 거점도시권과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조정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따라 재수립·재조정·해제 등 권역 현행화 제도를 보완
 - 생활권 단위 계획권 조정 및 광역생활권계획의 신설: 생활권 단위를 광역계획권과 일치시키고, 광역계획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는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계획 중복을 해소하며 자율적 권역 구성을 확대

(거버넌스)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정립

- (과제 2-1) 거버넌스의 구조적 개선과 제도화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계획 점검과 방향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확대와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
 - 거버넌스 강화와 계획전담기구 설치·제도화: 중앙-지방 간 권한과 역할을 조정해 협의형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수립·집행·평가를 일관되게 수행할 광역권 계획전담기구를 설치 및 제도화
- (과제 2-2) 지자체 간 협력 및 갈등조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 광역도시계획의 행정협력 기반 강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협력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공동 현안과 인프라·비용 부담 조정 기반 마련
 - 광역도시계획 갈등관리 및 단계적 합의 유도: 갈등을 사전 협의와 단계적 합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위원회 조정을 병행하며 재정지원과 비용분담 체계를 결합해 합의 지연과 계획 공백을 최소화

(집행) 재정·조정·이행관리체계 종합 개선

- (과제 3-1) 재정지원 및 자원조달체계 개선
 - 광역도시계획 재정지원체계 개선: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분절된 재정체계를 통합하고 집행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며, 공동기금 조성국과 국비 연계를 통한 상시적 재원지원체계를 구축
 - 국비보조 연계 및 통합운용 추진: 광역도시계획에 기반한 사업을 국비보조 심사에서 패키지로 연계·통합운용하고, 광역권 공모트랙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공동사업 추진과 재원 연계를 강화
 - 별도 자원조달체계의 모색: 도시계획기금과 초광역특별계정을 활용해 광역도시계획 집행을 위한 공동 자원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재원에 더해 광역사업 지원 특별회계·기금 도입을 검토
- (과제 3-2) 통합·조정기능 및 이행관리체계 구축
 -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부문계획 정합성 제고: 광역도시계획의 인프라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문계획을 통합하고, 예산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광역 차원의 투자 효율성과 계획 정합성을 제고
 - 이행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추진: 이행평가와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계획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로 연계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실행 방안

(단기 추진과제) 제도 정비를 통한 실행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며 법령·수립지침 개정과 운영체계 정비 중심 추진

- 광역도시계획의 제도적 위상 강화, 광역계획권 운영체계 유연화, 거버넌스 기능 활성화, 집행·재정 기반 확충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정리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적인 이행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중장기 추진과제)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권역 단위 공간관리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둠

- 단기적 제도 보완을 넘어 제도 전면 개편과 상호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정착, 관리·집행 체계 고도화를 지향하며, 제도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
- 광역도시계획을 단순한 계획수립을 넘어 정책 집행이 가능한 계획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간정책의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표 2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단기/중장기 실행 방안

| 구분 | 단계 | 기능 제고 세부 추진과제 | 제도 개선 유형 | 추진 주체 |
|--------|-----|--|------------------------------------|-----------------|
| 과제 1-1 | 단기 |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권 전담계획으로 법적 위상 정립, 「국토기본법」에 시·군·광역계획 신설, 계획 목표연도 유연화, 도시·군기본계획 대체기능 유지(필수 부문 중심) | 법령·수립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
| | 중장기 | 광역도시계획 성격 유형 다양화, 의무수립 대상지역 명시, 사전협의 기간 보장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의 선 수립, 활동인구 개념의 도입 | 법령·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지자체 |
| 과제 1-2 | 단기 | 광역계획권 지정 유연화(추가지정·권역 조정 규정 마련), 해제 절차 추진(목표연도 도래 권역 정비), 광역생활권계획 신설 | 법령·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지자체 |
| | 중장기 | 중소도시 등 시범도시권 운영제 도입, 생활권과 광역계획권의 일치 조정, 시·도 경계 초월 권역 기초지자체 참여권 확대 | 법령 개정/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지자체 |
| 과제 2-1 | 단기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조정·평가형 협의체 전환,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 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지자체 |
| | 중장기 | 협의회 기초지자체 참여 권한 강화, 중앙-지방 간 역할 재조정(상호 협의형 거버넌스), 계획전담기구 설치(전문조직·상설운영), 계획전담기구 법적 근거 마련 | 특별법 제정/ 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개선 | 중앙정부·지자체 |
| 과제 2-2 | 단기 | 광역행정 협력의제 사전 도출체계 도입, 행정협력 상설협의체 운영, 갈등조정 승인권자 참여 절차 개선, 단계적 합의 기반 계획수립 | 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지자체 |
| | 중장기 | 갈등조정 전담협의체 확대, 재정분담 갈등 해결 매커니즘 도입 | 운영체계 개선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지자체 |
| 과제 3-1 | 단기 | 광역 공모사업 트랙 신설, 광역계획권 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 법령 개정/ 운영체계 개선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
| | 중장기 | 광역도시계획 이행 재원 근거 법제화, 집행 전담기구의 법적 주체화, 특별회계·기금 연계 지원체계 구축, 광역도시계획 반영 사업 국고보조 인센티브 부여, 패키지 재정 지원 심사기구 운영, 초광역특별계정 활용 및 매칭펀드 도입 | 특별법 제정 / 법령 개정 / 편성지침 개선 / 운영체계 개선 | 중앙정부·지자체 |
| 과제 3-2 | 중장기 | 광역인프라 연계 조정체계 구축(부문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통합투자 관리 등), 자원 연계형 실행체계 구축, 이행평가·성과관리제 도입,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운영, 핵심성과지표,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법령·수립지침 개정/ 운영체계 정비·개선 | 중앙정부·지자체 |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4.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6월 17일 보도자료.
 김현수. 2022. 초광역권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초광역권 정책포럼 3차 발표자료.
 우명재. 2024.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지방 대도시권. 국토 통권515호: 13-18.
 지향시대위원회. 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요약).
 国土交通省. 2025. 도시계획운용지침, 13판.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2024. *Connect SoCal: A Plan for Navigating to a Brighter Future*. Los Angeles: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 **윤정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jyoon@krihs.re.kr, 044-960-0212)
-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jekim@krihs.re.kr, 044-960-0235)
- **정민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mkjeong082@krihs.re.kr, 044-960-0251)
- **노원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wonjun_no@krihs.re.kr, 044-960-0213)
- **박대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dkpark@krihs.re.kr, 044-960-0654)

※ 이 브리프는 “윤정재, 김중은, 정민기, 노원준, 박대근. 2025.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